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합의안 투표율 93% 돌파... '노노 갈등·주주 소송' 후폭풍도

등록 2026.05.26 17:53:42 | 수정 2026.05.26 19:34:23



[수원=뉴스1] 김종택기자 =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합의안에 서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스1] 남주현 기자 = 삼성전자 노사 간 2026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가 마감(27일 오전 10시)을 하루 앞둔 가운데, 조합원 투표율이 93%를 돌파했다.

가결 가능성이 높아 총파업 위기는 넘겼지만, 내부 갈등과 주주들의 법적 대응 예고가 이어지면서 노사 합의라는 마무리를 찍기도 전부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0분 기준 투표율은 93.45%로 집계됐다. 총 선거인수 5만 7319명 중 5만3567명이 투표를 완료했다.

초기업노조원의 80% 가량이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가결 우세 관측이 나오지만 투표권을 놓고 노조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며 '노노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주주들의 반발도 거세다.

주주단체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보상 체계가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임시주주총회와 단체 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수원=뉴스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의 가전·모바일 등 비반도체 직원으로 구성된 3대 노조인 '동행'이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26. gaga.99@newsis.com

DX노조 반발… 투표권 배제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이번 노사 합의안의 핵심 쟁점은 DS(반도체) 부문에 편중된 성과급 구조다.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 특별경영성과급' 지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연봉 1억원 기준 6억원 규모의 자사주 수령이 예상된다.

비메모리는 2억원, DX(디바이스 경험) 직원은 600만원 규모의 자사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전체 투표권자의 80%에 달하는 5만7000여 명의 초기업노조 구성원 사이에서는 가결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가전·스마트폰 사업부 중심의 동행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탈퇴한 동행노조는 투표 과정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DX 부문 직원의 결집을 막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가 "교섭대표노조에 투표권 강제 의무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동행노조는 "절차적 부당함을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달 초 2000여명 수준이던 동행노조 조합원은 1만3000여명 규모로 급격히 불어나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표 결과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일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인이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하지만 동행노조는 별도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노조 내부 분열이 격화되자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위원장 재선임 투표를 다음 달 중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원=뉴스시스] 김종택기자 = 민경권 대한민국의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

주주들의 실력 행사… "상법 위반" 임시 주총 예고

주주들의 움직임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주주 운동본부'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인 이익 처분 행위를 사측과 노조가 침해했다며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 측은 주총 결의 없이 영업이익에서 성과급을 떼어내는 것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우회하고, 위험을 부담한 투자자의 이익분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에 대한 반발도 나온다.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자사주 매입 등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은 주주 환원의 재원을 축소 시키기 때문이다.

당초 주주본부는 즉각적인 무효 확인 소송을 검토했으나, '동행노조'가 제기한 투표 중지 가치분 신청 결과를 확인한 뒤 소송 시점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르면 27일 주주명부 열람을 시작으로 주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주주서한을 발송해 결집에 나설 계획이다.

주주본부는 "삼성전자의 세전 성과급 산정은 조세권을 우회할 소지가 있다"며, 성과급은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합의라는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노조 간 갈등과 주주단체의 법적 대응이 얽히면서, 삼성전자의 성과급 합의안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jh32@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